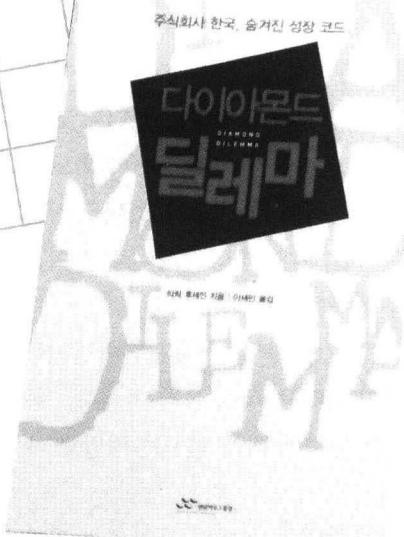


《다이아몬드 딜레마》

경제업적은 '박정희 때문이 아니라,
박정희였음에도 불구하고'라고 평가해야

글_최용식



《다이아몬드 딜레마》
타리 후세인 지음 | 이세민 옮김
325쪽 | 랜덤하우스코리아
값13,000원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 경제를 다이아몬드처럼 다시 반짝거리게 할 수 있을까? 《다이아몬드 딜레마》는 그 방안을 진지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일부 중요한 점을 간과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의 대부분이 필자의 견해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니 이 책을 근래에 보기 드문, 아니 국내에서는 과거에 보지 못했던 매우 탁월한 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 경제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진단에 있어서는 필자의 견해와 크게 달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업적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과 우리 경제의 현실이 대단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라고 보는 점이 그랬다. 이런 견해를 저자인 타리 후세인을 직접 만나서 말해주고 싶었다. 그는 이미 국내에서는 유명한 인사이고(‘TV 책을 말하다’에도 출연했다고 한다), 그의 이런 잘못된 진단이 경제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진단이 잘못되면 경제정책은 나쁜 결과를 빚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책을 처음 필자에게 소개했던 친지를 졸랐고, 드디어 지난 10월 말에는 그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업적에 대한 평가부터 말문을 열었다.

일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일으킨 공적이 박정희 정권에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각종 통계를 살펴보면, 해방 후 폭발적인 물가불안 속에서 퇴행과 혼란만 거듭해오던 우리 경제는 1957년 이후부터 드디어 본격적인 성장가도에 들어섰었다. 매년 수십 내지 수백 % 씩 오르던 물가는 1957년에는 전년대비 2.1%가 하락했고, 이후 1962년까지 5년 동안이나 물가상승률이 한 자리 수를 기록했다.

뒷걸음만 치던 성장률도 1957년에는 7.6%를 기록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성장 가도에 들어설 기틀을 마련했다. 그 뒤 성장률이 점차 떨어지고(1958년 5.9%, 1959년 3.9%), 1960년에는 3.15 부정선거 등의 영향으로 1.2%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1961년에는 다시 5.9%라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회복했다(이 해는 4.19 혁명으로 사회불안이 극에 달했다고 쿠데타 주도세력이 주장했던 때가 아닌가!).

그럼 무엇이 이런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불렀을까? 해방 후 우리 경제는 미국 주도의 무상 원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었다. 식량 등 거의 모든 물자는 물론이고, 국가의 살림살이인 재정까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런 원조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었다. 1950년대 중반부터는 무상 원조가 유상 원조로 바뀌

●이 글을 쓴 최용식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5년간 대한투자진흥공사에서 근무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과학적으로 해체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우겠다는 뜻을 품고 직장을 그만둔 뒤 30년 넘게 이 문제에 천착했다. 현재 21세기경제학연구소(www.taeri.org)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 작업을 하고 있으며 쓴 책으로는 『사상과 경제학의 위기』 『경제역적들아들어라』 『대한민국 생존의 속도』 『대한민국 생존의 경제학』 등이 있다.

었고, 원조금액 자체까지 크게 줄어들었다. 식량과 생필품 등을 돈을 주고 사와야 했고, 그러자 외환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출을 촉진해야 했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물가를 안정시켜야 했다. 박정희 정권의 최고 경제업적으로 치켜세워지곤 하는 ‘수출 입국’은 이미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셈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을 대체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 생산을 늘려야 했다. 문경 시멘트공장, 인천 판유리 공장, 충주비료공장 등이 완공됨으로써 자립기반을 갖추기 시작한 것도 바로 1957년부터였다. 또한 ‘전원개발 5개년 계획’이나 ‘탄전종합개발 10개년 계획’ 등이 이 해에 수립되었으며, 1958년에는 부흥부 산하에 산업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장기 개발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가 1960년 발표된 ‘경제개발 3개년계획’이다(계획수립 착수 후 2년이나 걸렸다).

이것은 4.19혁명으로 빛을 보지 못했지만, 새로 들어선 민주당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모태가 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민주당의 것을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하다(불과 두 달 만에 국가경제를 경영할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이 내세웠던 ‘경제 입국’ 구호도 5.16 쿠데타 이후가 아니라,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수립되었던 것이라고 해야 한다.

그럼 이런 일들을 해낸 사람들은 누구일까? 일제 식민지 배와는 거의 무관한 신진 관료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미군정 시절인 1947년 민정장관에 취임한 안재홍은 젊은이들을 대거 선발하여 미국과 유엔 등의 원조기구에 파견했는데, 이들이 경제정책에 발언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뒤부터 우리 경제는 도약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었다. 박정희 정권의 업적 중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점도 이들을 계속 중용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필자가 박정희 정권의 경제업적에 이처럼 집착하는 이유는 ‘박정희 식 경제정책’을 찬양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기 때문이다. 박정희 식 경제정책의 결말이 어떤 재앙을 불러오는지는 최근의 외환위기가 단적으로 증명했는데도 그렇다. 김영삼 정권은 ‘신 경제 100일 계획’이나 ‘신 경제 5개년 계획’ 등과 같은 전형적인 박정희식 경제정책을 펼쳤는데, 그 결과가 바로 단군 이래 최대의 난리라던 환란이었다. 이 점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가 ‘가발산업 적극 육성’을 외치면

가발산업이 3년 안에 거의 쑥대밭이 되었고, ‘합판산업 적극 육성’도 마찬가지였다. ‘섬유산업 적극 육성’을 내세웠을 때에는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나았지만, 섬유 재벌들까지 다수가 도산해야 했다. ‘중화학공업 적극 육성’의 결과는 더욱 비참해서 국가 시책으로 설립한 거대기업들이 거의 모두 부도에 직면해야 했고, 이런 거대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자본축적이 빈약했던 때에 엄청난 국가적 자원을 수십 년 동안 쏟아 부어야 했다.

혹자는 이때의 중화학공업 육성이 훗날 우리 경제의 효자노릇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전에 이미 중화학공업은 썩을 틔웠음은 물론이고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가발산업 때도 그랬고, 합판산업 때도 그랬으며, 섬유산업 때도 그랬다. 우리 옛말에는 ‘조장’이라는 것이 있다. 원래는, 벼를 더 빨리 크게 하려고 위로 뽑아 올렸다가 오히려 죽이는 것과 같은 짓을 의미한다. 박정희 식 ‘적극 육성’이 바로 이런 ‘조장’과 같았다. 공급과잉은 공황과 같은 재앙을 불어오지 않던가! 그리고 ‘적극 육성’은 공급과잉을 부르지 않던가!

그렇다고 박정희 정권 시절의 경제실적이 나빴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세계적으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탁월한 실적이었다. 다만 그 대가와 부작용이 너무 컸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박정희 정권시절의 경제업적은 ‘박정희 때문이 아니라, 박정희였음에도 불구하고’라고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물론, 이 책이 박정희 정권의 업적을 과도하게 높게 평가한 것은 저자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학문적으로 가치 있다고 평가할 만한 글들은 한결같이 박정희 정권의 경제업적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이다(그 저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박정희 정권 시절에 온갖 명예와 호사를 누리던 사람으로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다).

지금이라도 객관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나, 지난간 역사 는 세상의 주목을 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걸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재의 우리 경제가 대단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라는 그의 인식도 우리 경제학계가 발표한 각종 글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그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다.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과 잠재성장률이 어느 때 못지않게 높고 경제여건 마저 역사상 가장 좋다. 이 점도 그에게 말해주었으나, 이 문제는 이미 언급한 바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생략한다. ■■